

## < 要約 >

### ○ 構造 轉換期의 意味

- 세계화, 정보화, 국경없는 지구촌 경제의 형성, 사회주의의 몰락
- 환경과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로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 요소가 단기적으로도 全世界的인 下請(global outsourcing)을 통해 조정 가능
- 가상 은행(cyber bank), 가상 기업(cyber firm) 등 假想의 새로운 時代 도래

### ○ 우리 經濟의 構造 轉換期 到來

- 高成長에서 中成長, 低成長 기조로 전환
  -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한 量的 成長의 한계로 새로운 技術 革新 필요
  - 인구의 老齡化와 가치관의 변동으로 투자를 뒷받침할 貯蓄率 下落
- 小規模 開放 경제 시대에서 完全 開放 경제 시대로 전환
  - 通貨 政策과 같은 각종 거시 경제 정책 수단의 有效性 低下

### ○ 國內 經濟 診斷과 政策 評價

- 현재 경제 不況은 경기 循環的인 요인보다는 構造的인 데 있음
- 최근 정부의 政策 運用 目標가 단기적으로 物價 安定과 國際 收支 赤字 縮小, 장기적으로 體質 改善과 經濟 安定에 두어지는 것은 옳음
- 그러나 경상 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

### ○ 政策 代案 摸索과 選擇

- (低成長 政策) 저성장 정책은 物價 安定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대폭적인 경상 수지 적자 개선은 어려울 것임
- (換率 政策) 환율 切下는 價格 競爭力 회복으로 輸出 增加 효과가 있으나 輸入 物價 상승과 外債 元利金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음
- (赤字 財政) SOC 투자용 國債 發行을 통한 赤字 財政은 국제 상환 때문에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줌.
- (規制 緩和) 규제 완화는 우리 경제의 競爭力을 提高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金融 部門의 規制 緩和가 중요함

- 結論的으로 거시 경제 정책의 최우안점은 國際收支 防禦에 두어져야 함
- 經濟 成長, 物價 安定, 國際收支 均衡 등 경제 정책 목표는 서로 상충 관계에 있어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음
-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 있어서는 경제 균형은 對外 均衡에 의해 국내 균형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보임

○ 國際收支 赤字 解消를 위한 方案

- 巨視 政策
  - (換率 政策) 환율 결정은 市場 原理에 따르되, 현재 수준보다 切下되어야 함
  - (財政 政策) 환율 절하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기 위한 재정의 緊縮 運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非效率的인 공공 부문의 民營化가 시급
  - (景氣 對策) 人爲的인 경기 부양은 경제의 안정 기초를 저해하므로 止揚해야 함
- 微視 政策
  - (에너지 政策)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省에너지 대책이 필요
  - (貯蓄率 提高) 국제수지 적자는 저축과 투자의 罅(gap)인 만큼 저축률 제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개인의 假處分 所得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女性 인력이나 老齡 인력의 勞動 市場 參與와 이들 소득에 세제 혜택이 필요함. 아울러 사교육비의 축소를 위한 教育 制度의 改革이 필요함

○ 國際 競爭力 強化를 위한 補完 課題

- 金融 構造의 改善이 필요
  - 金融實名制의 補完을 통해 자금 흐름의 개선이 필요함
  - SOC 투자용 장기 저리채 발행, 중소기업 전담 금융 기관의 설립, 대금업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經濟 規制의 緩和 필요
  - 시설제 관련 상업 차관 도입에 대한 규제 완화
- 地價 安定
  - 土地 供給 측면에 중점을 두어 지가의 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물류 비용 절감, 기술 경쟁력 제고, M&A 유도 등

< 主題 發表 >

대외적으로 세계화·정보화가 진전되고 대내적으로도 생산요소의 글로벌 아웃 소싱이 가능하게 되고, 가상의 새로운 세계로 급진전하는 것이 구조 전환기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구조 전환기의 거시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구조 전환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전환기란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국경없는 지구촌 경제의 형성, 사회주의의 몰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과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과거의 자본, 노동,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가 단기적으로도 전세계적 하청(global outsourcing)을 통해 조정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상 은행(cyber bank), 가상 기업(cyber firm)과 같이 가상의 새로운 시대가 급진전함에 따라 과거 경제학의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 등이 구조 전환기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두가지의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構造 轉換期를 맞이한 우리 經濟

우리 경제는 양적 성장의 한계와 투자를 뒷받침할 저축의 감소로 고성장에서 중성장, 저성장으로 가는 구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경제가 고성장에서 중성장, 저성장으로 가는 구조 전환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폴 크루그만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경제 성장 전략이 과거에는 노동에 자본을 결합해서 양적 성장을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없이는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경제 발전 단계와 관련된 구조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는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 활동 인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소위 모달리아니

의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 보듯이 20대는 투자하고 30~40대는 저축하고 50대 후반, 60대는 소비를 한다고 볼 때 우리 경제 활동 인구의 구성비가 노령화가 되고 소비 계층이 많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계층의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개발 연대와 달리 지금은 집을 없어도 자동차를 사야 하고 연월차 수당은 못 받더라도 스키는 타야 하는 식의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여피족과 같은 자산가, 중산층이 하던 경제 생활 패턴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반적으로 퍼짐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저축률이 떨어지고 성장 자체가 정체되어 가는 측면에서 고성장에서 중성장, 저성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 시대에서 완전 개방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소규모 개방 시대에서 완전 개방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대응 능력이 극히 취약합니다. 특히 거시 경제 정책에 있어서 통화정책과 같은 각종 정책 수단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최근 성장률은 떨어지고 국제 수지 적자 규모는 점점 커지고 경기 침체로 실업률은 높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불안하여 우리의 거시 경제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정책 수단은 더욱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國內 經濟 診斷과 政策의 評價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은 경기 순환적인 것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은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는 97년도 하반기나 98년 초에는 경기 수축 기간이 끝나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았을 때는 지금의 경기 침체 상황이 조금 장기화되지

최근 정부의 정책 운용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국제수지 적자 축소,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과 경제 안정에 두는 방향은 옳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심각성은 실제 수출 전선에서 일하는 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않을까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게다가 97년 대선을 비롯해 98년, 2000년에 선거가 있는 등 정치 사회적인 변수 때문에 경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97년도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운용 목표는 국제수지 방어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속에 경상수지 적자는 축소하되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7년도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7% 정도에서 6% 이하의 저성장으로 갈 수도 있으며 물가는 4.5%에서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96년에 237억 달러가 되었고 97년 1~2월에 이미 5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 적자 목표도 120~16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 운영의 목표를 평가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국제수지 적자 축소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과 경제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방향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 수출 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5대 수출 전략 상품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이 여전히 나쁩니다. 최근 국제수지 적자 요인으로 반도체 가격의 폭락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반도체 산업이 굉장한 호황을 누렸는데 이때의 16 메가 DRAM의 가격이 40 불 이상되었던 것이 비정상이지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16 메가 DRAM의 가격이 6~8 달러로 떨어져서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손해를 보았다는 얘기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측으로는 달러당 114~115엔 했던 것이 달러당 122엔, 124엔까지 절하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여

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높고 일본의 경기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등의 이유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원화도 절하되고 있었지만 엔화에 비해서는 덜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政策 代案의 摸索과 選擇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거시 경제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고 정책 수단을 혼합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앞서 우선 연구 기관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경제 성장을 목표를 잡는데 있어서, 이제는 저성장이 되더라도 감수하고 거품을 빼자는 주장과 매년 늘어나는 40~50만의 신규노동력을 흡수하자면 계속 6~7%는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장을 하향 조정할 때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건설 투자 및 소비의 축소에 의한 성장률 하락 유도는 물가 안정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대외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대폭적인 경상수지 개선은 어렵습니다. 물론 통화량의 감소에 의한 성장률 하락은 물가 안정 및 무역 수지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는 통화량의 감소가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수입 수요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자재와 같이 국내 경기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재화의 수입 지속으로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소폭에 그칠 것입니다.

둘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절하 문제가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많이 논의되는데 국제 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데는 환율 절하 방법밖에 없다는 환율론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요즘 IMF나 돈 부시는 환율 절하가 맞

성장률 하락은 물가 안정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대폭적인 경상수지 개선은 어렵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환율 절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SOC 투자 재원 조달의 방편으로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 발행에는 금리 자율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노동·금융·자본 시장 등 요소 시장입니다.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론자들은 환율을 지금 수준보다 올리면 수입 물가를 올리고 외채 부담을 점점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수출 확대로 얻는 것보다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이 더 커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환율이 절하되는 것은 투기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외화 예금이 20억불에서 40억불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을 절하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셋째, 경기 침체 현상이 과거보다 심해지니까 정부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이 커지고 또 SOC 투자 재원 조달 방편으로 SOC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 재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재원 마련을 세수로 하느냐 국채 발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부담이 현 세대가 부담하느냐 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 경제 정책 운용 과정에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국채 발행에는 금리 자율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통화 신용 정책에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통화 조절과 시장 개방의 대전제인 금리 현실화·자율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통화 안정 증권만으로는 공개 시장 조작의 대상이 적음으로 인해서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제 규제의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행정 절차상의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질적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의미의 규제 완화는 적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규제도 많은데 규제 완화가 가장 필요한 부문이 노동, 금융, 자본 시장 등의 요소 시장입니다. 그런데 진입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요소 시장만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

거시 경제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렵고,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대외 균형에 의해 국내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국제 수지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가 중요합니다. 금융의 비효율성 때문에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금융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금융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쿠라쇼의 행정 개혁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시 경제 정책 운용의 최주안점을 국제 수지 적자 방어에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 국제 수지, 물가 문제는 서로 상충 관계에 있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에 있어서 경제 균형은 대외 경제 균형에 의해서 국내 균형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제 수지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 國際收支 赤字 解消를 위한 方案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율 절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느냐? 첫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환율 정책입니다.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수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880원에서 900원이 넘고 어떤 경우는 950원까지 절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보다 더 절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가 상승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부문의 긴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물가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서 재정의 긴축 운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의 민영화로 정부 재정 부담을 축소하고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예산 및 행정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에는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위적 경기 부양은 안정 기조를 저해할 것입니다.

국제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시적인 방안인 에너지 소비의 절약을 위해서는 절약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저축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있겠지만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장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쓰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안정 기조를 저해할 것입니다.

한편, 거시 경제 정책 수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정책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해 경상 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입은 95년 187억달러, 96년 240억달러, 97년에는 약 27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이나 독일은 절약에너지 정책을 써서 성공한 것에 비해 우리는 석유 소비가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고에너지가를 유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절약에너지 산업을 강화해야 하는 중장기 대책을 철저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저축률 제고입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구조 전환기에 있어서 거시경제 정책방향」의 주안점으로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 모두 저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동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경제는 양적인 단순한 생산 요소에 단위당 증가율만 높여서 경제 성장하는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축이 많아져야 하는데 저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라는 것은 결국 투자와 저축의 갭(gap)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축을 좀 늘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의 금리를 높여 저축률을 올리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늘리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임금 인상 요구 등에 의한 노동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家長 혼자 벌어 전부 쓰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성 노동력을 인정하고 나이먹은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얻는



소득은 세제상 혜택을 주어서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세부담률 비중이 약 3.4%이고 기업은 2.7%인데 이것도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저축률은 연금 등으로 높아진 데 비해서 민간 저축률은 낮아졌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간 저축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교육비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전 TV에 보니까 공무원의 부인이 과출부를 합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저축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國際 競爭力 強化를 위한 補完 課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실명제의 보완을 통하여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 과제를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금융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경유착을 근절하며 조세정의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는 사회적, 정치적 개혁의 의미보다도 경제 개혁이고 금융 개혁이니까 거기에 중점이 주어질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명화와 종합 과세를 통해서 왜곡된 조세 형평을 기한다는 면이 있는데 왜곡된 금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개혁 목표가 약화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금융실명제를 하면 그 부작용 내지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금융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대금업을 허용한다든가 하는 보완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세제쪽이 많이 강조되

저축 문제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C 투자용 장기 저리채 발행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금융 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금융 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 흐름의 왜곡 내지 원활하지 못한 것을 풀어주는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 문제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위 SOC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장기 저리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면죄부를 준다든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안했을 때도 차명으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채로 사금융 시장에 있다고. 그래도 결국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금융 기관에 들어갈 것 입니다. 그러면 A계정에서 B계정으로 옮기는 것이나 또는 저축성예금 계정에서 요구불 예금 계정으로 바뀌는 것뿐이고 그렇게 그때 그때 따라서 유동성이 확대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산업 자금이나 생산성 있는 자금으로 유인해서 금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목적을 위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산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해야 하고 업무 영역 구분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 한보 사건과 관련되어서 금융 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해외 자금 차입은 외환 보유고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차관은 안되겠지만 시설재 관련 상업 차관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러한 거시 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비금융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야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토지 가격의 안정인데 역대 토지 정책의 초점은 투기 억제나 수요 관리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공장 부지의 공급 확대라든가 하는 공급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地價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이외에 물류 비용 절감,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문

그밖에 물류 비용 절감,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되고 있는 적대적 M&A는 좋은 의미로는 구조 조정이나 경쟁력 제고의 한 방법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토의가 더 진행되어서 정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討論 內容>

사회 : 김원장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김병주 : 김원장께서 현실의 문제점을 잘 요약하고 대책도 큰 줄기를 잘 잡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6%, 5%, 혹은 그 이하로 가더라도 단기 부양책은 내놓지 않고 안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정부의 자세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가도 4.5% 목표내에서 운용하면서 경제 정책의 초점을 경상 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데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저축 증대와 투자 축소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투자 축소를 위해 민간 투자는 권장해야 하지만 정부 투자는 축소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적자가 GNP 대비 4.7%인데 이것을 어떻게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와 저축의 갭이 수입과 수출의 갭인 경상 수지인데 적자 축소를 위한 투자와 저축의 갭을 줄이는 방법은 저축 증대와 투자 축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의 설비 투자는 권장해야 되겠지만 정부 부문의 투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SOC 투자 기간을 연장 내지 연기 또는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 자치 단체들의 건물 신축 내지 도청 이전에 투자가 많은데 이것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 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노동 시장의 경직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을 겪으면서 노동법이 개정되고 그것이 정착됨에 따라서 노동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문제는 작년 스위스 IMD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세계 48개국중 어떤 것은 48위, 어떤 것은 45위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인데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서 금융 개혁이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김원장께서 지적하신 해외 차입 규

재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하신 많은 문제가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 어느 형태라도 단기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명 장기 채권 발행도 말씀하셨는데, 금융 실명제 보완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것은 분리 과세와 중소기업 지원, 벤처 비즈니스, SOC 관련 장기 채권 발행을 권고하는 안, 실명제를 보완하는 작업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사회 : 다음은 양박사께서 말씀해주십시오.

현 상황은 구조 전환기이고 따라서 구조 조정을 해야 하고 경제 운용도 기본적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양수길 : 구조 전환기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 상황은 구조 전환기이고 따라서 구조 조정을 해야 하고 경제 운용도 기본적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80년대에 3년간 3저 현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고, 정치·경제적인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국민의 기대도 지나치게 부풀어졌고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서 생긴 거품 제거 작업을 아직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2년에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면서 구조 조정이 추진되는 듯하다가 93년에 경기 부양을 추진하는 바람에 구조 조정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어 어느 정도 진전을 본 노사 관계 개혁, 금융 개혁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그때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체되어 지금 우리가 겪는 진통중에 많은 부분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 시기는 지났으며 중 성장 기조로 전환해도 실업 문제는 없습니다.

김 원장 말씀대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 시기는 지났습니다. 인구 증가율과 노동 생산성의 점진적 둔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중 성장 기조로 전환해도 노동력 증가율이 둔화되는 만큼 실업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방 체제로 가면서 거시 경제 운영의 폭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개

방 경제 체제하에서는 경기 조절 정책에 기본적으로 큰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고 구조 조정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방 경제에 있어서는 전세계로부터의 수요가 우리 생산품에 대한 수요이므로 수요 조작을 통한 경기 부양은 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할 것은 지금 우리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경제외적인 요인에서 유래된다고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80년대 말 이후 급속히 이루어진 정치 민주화에 대한 국민 의식의 적응, 정치 사회 제도에의 적응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좀 더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역재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서비스 부문 즉 비교역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조정 노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 :** 양 박사 말씀은 우리 현안 과제로서 굉장한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매년 2% 이상 늘어나는 경제 활동 인구의 추가적인 실업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흡수하려면 최소한 6% 이상 성장하여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작년 9월의 계절 조정에 의한 실업률이 약 1.8%, 금년 1월에 2.4%로 나타나 있는데 실업자 수가 17~18만명 정도 늘었습니다.

성장을 하락에 의한 실업자의 증가 문제가 우려됩니다.

물론 경제 활동 인구가 계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실업률 0.1% 포인트 늘어나는데 실업자 수가 몇 명 늘어난다는 얘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5% 성장할 때 작년보다 실업자 수는 언제를 기준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25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나도 사회 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성장과 실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정부의 경제 운용 목표에서 빠져야 합니다. 가령, 실업이 심각할 경우 이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늘리는 구조 조정 정책을 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은 그쳐야 합니다.

양수길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실력껏 성장을 하자는 말이지 일부러 성장률을 높이거나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7, 8% 성장을 했는데 올해 안되었으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 성장률을 늘리자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정부의 경제운용 목표 변수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은 산업 활동을 통해서 민간 부문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간주도 경제라는 근본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민간 부문이 실력껏 능력을 발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 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늘리는 구조 조정 정책을 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완전 고용에 가까운 높은 고용이 실현되지 않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례로, 영국이 70년대 말까지 완전 고용을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의 하나로 명문화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대처 여사가 수상이 되고 나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완전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누락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 고용을 정부 책임으로 추구하다보니까 그것이 정부 정책의 불모가 되어 오히려 사회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처 수상의 개혁 결과 오늘날 영국의 실업률이 7%대로 유럽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 90년대 들어서 제로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데 관련시켜서 유명한 국제 경영학자인 오마이젠니치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의 실업률이 2% 정도로 낮은 것이다. 거의 완전 고용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의 경제 구조 조정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경제 구



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그것을 너무 숫자에 집착해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면 경제 운용에 무리가 생겨서 구조 조정이 안된다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 목표를 균형되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본주의의 특징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최 광 :** 저는 모든 정책 목표를 균형되게 장기적으로 보아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 후생(welfare)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계량화가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경제 후생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자들이 보았을 때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중요 정책 목표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론적인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다른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유 재산권의 인정과 자유입니다. 그 두 가지 지주가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두 가지가 거의 안 지켜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사유 재산권은 많은 소급 입법 등에 의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에 힘든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경제의 구조 조정을 이야기할 때 정치와 경제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구조 조정이 되면 경제뿐 아니고 다른 것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남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외국 사람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좌승희 :** 구조 전환기의 의미를 두 가지로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 우위의 원천이 달라져

구조 전환기는 과거처럼 거시 경제 정책이 성장을 촉진하고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된다는 의미와 동시에 시장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합니다. 결국 정부의 거시 정책은 소위 미시적 경제 활동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안정적이냐 경제가 안정적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거기에 있는 경제 주체들에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느냐 하는 데 거시 경제 정책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거시 경제 정책이 성장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뉴질랜드는 경제 개혁 내지 구조 개혁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얻은 결론은 반경기 정책(anti-cyclical)은 빨리 포기하라, 경제 안정 다시 말하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거시 경제 정책도 거기에 맞추어서 끌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국제 수지 적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본 자유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냐 많이 안 내려가도 이 추세가 정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중기적으로 보아야지 모든 국민이 모두 경상 수지 적자에 매달리면 다른 경제 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에게 여유를 주는 측면에서 경상 수지 적자는 장기적인 투자라는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양수길 :** 현재 우리의 국제 수지 237억불 적자 상황에서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우선 그 자체를 가지고 외채의 위기가 온다고 보는데서 오는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국제 수지 운용 과제의 가장 큰 목표는 적자 자체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적자가 있으면 외채 위기가

현재의 국제 수지 적자는 외채 위기에 대한 문제와 경상 수지가 90년대 들어 적자 기조로 전환하였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벌어질 때 외국에서 기채를 해서 보완하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자본 시장에서 볼 때 한국이 국제 수지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도를 키우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만일 심리적으로 한국이 문제가 있다면 적자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외채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제 수지가 90년 이후로 기조적으로 적자로 되돌아갔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상 수지가 적자 기조를 유지하는 한 우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족쇄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제 활력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지 적자의 기조 전환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 유입의 부진과 단기 자본 유입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병주 :** 경상 수지 적자가 진행되어도 자본이 원활히 유입된다면 자본 계정에서 경상 수지 적자를 메꾸어 가면 되는데 현재 그것이 어렵고 자본 계정에 단기성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집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최근 들어 경상 수지 뿐만 아니라 종합 수지도 외국에서의 기채가 어려워져 적자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원장께서 주제 발표를 통해서 던졌던 과제들이 올해 경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슈화될 문제들인데 과연 환율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재정 운용의 기본은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도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운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토론을 통해 구체화해 나갑시다. 먼저 환율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좌승희 :** 멕시코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200억불 넘는 경상 수지 적자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대로 놓아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적응 능력을 대외에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놓아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멕시코 외환 위기의 출발은 환율이 절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하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절하 기대가 생겨서 자본 유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화 환율이 절하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환율이 내려가는 원인이 있으면 끝까지 가도록 놓아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멕시코 사태를 막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외부에 대해서 우리의 적응 능력을 알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환율 절하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양수길 : 반면에 인위적으로 환율 절하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환율 문제는 시장의 기본적인 수요·공급 여건에 맡겨서 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한다면 이것 자체가 자본 시장의 동요를 유도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 환율과 관련한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가는 것이 대내외 균형을 이룩하는 선이냐 하는 것과 그 진행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병주 : 환투기는 외국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기업이라든가 국내 투자자들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 : 그러면 재정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승희 : 재정 긴축을 너무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석해 보면 최근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 기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을 긴축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적자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긴축을 얘기하면 투자나 실업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최 원장께서는 특히 적자 재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SOC 문제와 연관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광 :** 다른 정책 수단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재정 정책이라는 정부의 한 수단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재정이 국제 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과 연관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분법으로 긴축이나 확대나 적자나 흑자나 이렇게 문제를 보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적자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자라는 걸로 나온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재정 전문가로서 아까 김 원장이 제기한 차세대 부담이 될 장기 국채로 SOC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통한 적자 재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 :**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SOC 국채를 발행하자는 원칙은 갖고 있는데 이때까지 안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 부양책으로 국공채를 발행하자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되지도 않거니와 성공한 나라도 없습니다. 재정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세대 부담으로 하는 조세 부담과 다음 세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SOC 국채를 발행하는 원칙은 갖고 있는데 이때까지 안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 부담하는 국공채 발행과 같은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과정에서도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실명제 보완 문제가 나왔지만 국공채를 무기명으로 한다면 조금 완화될지 모르지만 금융실명제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은 막는 등 한계를 정하면서 정책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 :** 다음으로 국제 수지 개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에너지 문제는 가격 자율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승희 :** 에너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격 체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싼 값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너지 과소비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 자율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축 유인 정책 중에 사교육비 부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교육비 부담은 결국 학원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 심지어는 해외에서라도 들여와서 사교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공급의 애로를 터준다는 의미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구조 개혁에 대해서 금융 기관 소유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과점 주주들이 자기 경영권 4%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회에 몇 사람 넣어라 말라 하는 것은 필요없고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4% 가진 사람들이 알아서 경영권을 창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율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 정책 패턴이 바뀌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일 첫번째로 산업 정책을 못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금융자율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대적인 M&A가 있어야 경영자가 책임 경영을 하게 되므로 이것을 막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김병주 : 금융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하나는 소유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 문제인데, 이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주주들이 들어와도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M&A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융 상황으로 봐서는 M&A가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의 시각 차이가 있고 오히려 적대적인 M&A가 있어야 경영자가 책임 경영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간 산업이라든지 특수한 분야는 몰라도 이것을 막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수길 : 가격 자율화 혹은 합리화, 현실화하는 정책이 자원의 절약, 낭비 억제를 통해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요금을 올리면 휘발유가 절약될 뿐 아니라 도시 교통 문제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주차료나 혼잡 통행료를 받으니까 시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지만 승용차 운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 기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공공 요금이나 수도물 등의 희소 자원 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가 절약되고 저축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과소비 문제인데, 과소비란 말만 나오면 국제청, 검찰청, 관세청이 나서니까 국제 통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공 부문 자체를 구조 개혁해서 효율화하는 것이 규제 완화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원장께서 행정 절차의 합리화라는 차원을 떠나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규제를 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인 규제 완화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역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 부문 자체를 구조 개혁해서 효율화하는 것이 규제 완화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금융실명제는 정치 개혁 측면, 경제 개혁 측면, 금융

개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명제를 도입하면 정치 개혁 혹은 경제 개혁, 즉 조세 형평 차원에서는 순기능을 하고 금융 시장에는 역기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명제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금융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무기명 채권 자체는 기본적으로 실명화라는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보호도 철폐해서 문자 그대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최광 :** 규제 완화와 더불어 보호도 철폐해서 문자 그대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사고가 형평에 치중되어 있지만 효율성도 높이고 고비용 저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 모든 부문에서 경쟁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 시장, 상품 시장이 있고 요소 시장에는 자본 시장, 노동 시장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자본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저축 증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도 종합과세 안되는 액수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없어서 저축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세 수단으로는 저축률, 저축 규모가 절대로 증대되지 않습니다. 세제가 저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론도 없고 실증 연구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에 대한 차등 과세로 우리 금융 기관에 쓸 데 없는 계정만 만들고 자금을 움직이게 한 비효율이 저축 증대에 도움이 안되고 비용만 증가시킨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명제 하나에 너무 치중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하나로 어떻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실명제는 모든 거래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거래, 실물 거래, 자본 거래, 개인간, 기업간, 정부 그 중에서 금융 기관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 한해서만 금융실명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거래에 다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보완 방안 중에 실명거래법을 긴급명령에서 일반법으로 대체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에 대응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제도나 법에서 역할 분담을 해야 목적이 달성되지 하나의 긴급명령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 : 오늘 장시간 토론 감사합니다.